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저지활동

1 1998년 국가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IMF로 인하여 도서관을 찾는 국민들은 늘었는데 자료구입비 등 운영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렇듯 재정투입이 어려워지자 운영주체들은 단순하게 경제논리를 앞세워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들먹이면서 1년 내내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크게 흔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위기는 역시 공공도서관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 다른 기관을 만들려고 한 시도가 무척 거셌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들은 몇몇 도서관이 1999년에는 이제 더 이상 도서관이 아니게 되는 구체적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다.

2 6월 경 강원도 춘천시립중앙도서관이 '강원평생교육정보관'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미 관련 조례개정도 끝난 상태였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충격은 컸다. 결국 9월 1일 공공도서관 1관은 사라졌다. 춘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시작된 최근의 일부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의 표면적 이유는 평생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을 재편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부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년동안 꾸준히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임토록 규정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4조 1항) 때문에 상위직 행정직 공무원들이 도서관 관장에 보임될 수 없는 한계를 원천적으로 피해가려고 공공도서관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일부 교육청에서 집요하게 명칭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춘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관할 도서관 중 일부를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소위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서관 일부를 평생교육 관련 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실리를 챙겨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도서관계는 즉각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도서관들을 방문하고 진의를 파악하였으나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별 생각없이 말한 것이고, 현장에서 이에 잘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계의 사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9월 북구·서구·화도진도서관 3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된 '인천광역시평생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조례안은 10월 초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이 안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인천광역시의회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으로 도서관 문제를 희석시킨 조례안으로 바꾸어 제출하였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이후 도서관계는 문화관광부 관계관과 함께 시의회 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만나 도서관 명칭변경의 부당함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의회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게 되었고, 결국 11월 초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내용은 삭제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청의 명칭변경 시도

는 일단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원미경 의원이 보여준 예리한 통찰과 적극적인 지원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관할 도서관 중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였다. 10월 말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 중에는 마포도서관을 비롯한 6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고, 구로도서관과 고척도서관은 통합하여 1개의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 또한 결국 관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저의를 깔고 있었음은 이후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도서관계는 이미 교육청의 의도를 사전에 간파하고 6월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면담, 도서관을 없애는 조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현실적 애로(운영재정 확보와 교육청 인사의 어려움)를 이유로 이러한 조처를 시도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도서관계는 인천광역시와 일과 겹쳐 1998년 하반기는 교육청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발표 후 도서관계는 즉각 또다시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한겨레신문(11.5.)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 탓인지 시교육위원회(11.6.)에서는 6관 중 4관만을 명칭변경하고, 구로와 고척도서관 통합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날 일부 서울소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시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도서관계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교육청, 기타 관계요로 등의 접촉을 통하여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도서관 명칭변경 조항을 삭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1월 19일에는 대한매일신보를 통하여 2차로 성명을 발표하였고, 11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또다시 면담, 조례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 후에도 수 차례 행정관련자, 시의원, 시민단체 등을 방문 면담하고 신문 및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명칭변경 중단을 촉구하였다. 12월 10일에는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도서관 위기상황,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도서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가, 공공도서관을 없애려는 교육청의 의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는 끝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그 저의를 더욱 의심케 하였다.

시의회에서는 도서관계 및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문교보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소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과 도서관 명칭변경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자료집 제공을 통하여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12월 15일 소위원회는 조례안 제출자인 교육청 관계자들과 문화관광부와 우리 쪽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를 출석시켜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서관계는 교육청의 저의를 지적하고, 도서관은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법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는 도서관 발전을 천명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기능강화가 아니라 아예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기능전환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경과보고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결국 교육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시기를 조례실시일로부터 6개월 후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치 공공도서관 부실의 원인이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한 것이라는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수용, 이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채택,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전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인 홍승채 의원은 관장직의 복수직 보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도서관의 평생학습관 개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려는 것은 평생교육 강화나 재정적 어려움 해소가 아니라 바로 관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밝혔다.

5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이외에도 울산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11월 중부도서관의 확장 개관을 계기로 아예 그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였으나, 울산시청과 시민들, 그리고 도서관계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이 또한 저지할 수 있었다. 거제시에서도 거제도서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서관 신축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거제교육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려는 거제시교육청의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그 처리가 보류되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무성한 소문은 있었으나 명칭변경은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거제시 등에서는 명칭변경 시도가 저지되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의도대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199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들을 당혹케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6 이제 한 단계의 싸움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공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명칭변경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교육청의 시도는 저지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활동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주변의 많은 협조자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이번 싸움과정을 통하여 그 동안 스스로 낙약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선 전국에서 수많은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싸움에 동참하였다.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성금이 2천만 원을 넘어 모든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전국적인 성원을 힘입어 예전과는 다른 보다 강도 높은 싸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소중했던 것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명칭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준 많은 현장 사서들의 마음과 노력이다. 이러한 사서들의 지지와 실천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명칭변경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도서관을 향한 어떠한 도전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자원동원 능력과 방법 등을 얻은 것도 적지 않은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아쉬운 점은 일차적으로 도서관 정책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실제로 일선 도서관들을 관할하는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탓에,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과 시의회 등의 현실론에 매우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향후 큰 숙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 도서관계의 입장과 행동 통일이다. 물론 도서관과 사서 개개인들의 입장과 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번 싸움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서관계의 일치된 입장과 행동이다. 이번 싸움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도서관계의 상반된 입장표명과 행동이었다. 이는 결국 상대방에서 우리들의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훼손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사불란한 교육청을 상대로 우리들 스스로는 분열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의회 등을 상대할 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 모두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7 일련의 싸움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싸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용자들의 항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싸움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이용자들은 도서관 문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는 했지만 이 또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의 정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대중들의 관심과 생활의 중심에 서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동안 도서관을 국민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일차적 책임은 행정당국자들이다. 이들은 도서관을 그저 공부방으로만 인식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해 왔고, 그 결과 우리의 도서관들은 여전히 학생들의 공부방이고 아직도 그저 ‘단순 영조물’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떠 안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 도서관계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서는 이번과 같은 위기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서관을 행정당국자들의 손에서 이용자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이제 전문가들인 우리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이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싸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행동을 촉구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도서관이 항상 위기상황에서 처해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문화시대에 도서관은 국가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필요한 문화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서관계는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이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수비적 자세가 아닌 항시적으로 공격적 자세로 전환할 때이다. 사람만이 희망인 때에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는 바로 우리 도서관계 각자의 노력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그 성과가 단단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나라 도서관계도 비로소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원고정리:이응훈·기획부장